

이명박 정부 농정의 핵심 기조 및 전망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한미FTA 국회 비준 등 굵직한 농정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농업관에 따라 농업 정책의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농업관과 농업기조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농업 정책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려고 한다.

-편집자주-

1. 이명박 대선후보의 주요 대선공약은?

이명박 당선인의 농정 공약 캐치프레이즈는 ‘농업에는 경쟁력’, ‘농업인에게는 복지를’, ‘소비자에게는 웰빙을’이다. 우선 농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 FTA 국회 비준은 선대책·후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을 만들어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농가단위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 비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쌀 목표가격은 5년 동결을, 농가부채는 ‘농가부채 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농지은행에 5년간 10조원 규모의 정부출연 농지신탁기금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부채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림부 명칭을 ‘농수산식품부로 바꿔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농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여 농업에 대한 부가

가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농민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보장 할 방침이다.

한미FTA 국회 비준을 반대 해 온 농업계와는 대립을, 쌀 목표가격 동결, 농가부채동결법 제정, 식품업무 일원화를 주장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이명박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농업 경쟁력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로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였다. 실제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되자마자 공기업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 등 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예정 중에 있다.

물론 농업도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돈 버는 산업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민들이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2·3차 산업에도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1조원이 넘는 공격적인 수출 농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하고, 연매출 1,000억원 정도 되는 지역경제기반형 농기업을 100개 만드는 등으로 농업부분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이 당선인은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은 자유 무역협정(FTA)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적어 힘들다”며 “농



민들에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농업관에 따라 향후 FTA는 미체결 국가들과 더욱 탄력을 받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미FTA는 이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돈버는 농업, 효율성을 중시하는 농정을 펼칠 경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등한시 되고 구조조정예 대한 폐해가 발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지거래를 자

유화를 통해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지거래 자유화에 따른 난개발과 투기의 우려가 상존되어 있다.

아울러 농업계는 생산기반 정비 및 영농규모화, 산지유통 혁신,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 등을 강조한 반면 이당 선자는 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문 부가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농업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농업계, 효율성과 개방을 통한 경쟁력을 강조하는 이 당선자의 농업관의 차이는 벌써부터 크게만 느껴지고 있다.